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

정진성

I. 머리말	IV. 전시 여성동원: 일본군 위안부 서술의 성·민족·계급 편향의 교착
II.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	V. 맺음말
III. 젠더 편향 서술의 구조	

I. 머리말

역사서술에서 여성의 젠더 편향적인 경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서양에서는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 많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고쳐지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여성사는 주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된 채 ‘여성사’라는 별도의 범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 서술에서 젠더 편향은 지배계급과 지배민족 중심의 역사서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중고교 교과서에서 젠더-민족-계급의 역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사 쓰기는 기존 역사학의 젠더 편향성을 문제제기하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제2물결을 이끈 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역사학이 여성을 비가시화하거나 남성중심적인 역사서술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성주의 관점으로 역사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여성의 자리를 되찾기”를 모토로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밝혀내고,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가시화하며 여성운동사에서 의미있는 여성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千聖林, 2008:133-134).

역사 서술에서 젠더 편향성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비가시화이다. 전반적으로 역사서술에서 여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나 역사발굴을 통해 비판되고 보완되어 가고 있다. 무엇을 서술하는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역사가의 시각에 따라 그 중요도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업이 간단치만은 않다. 그러나 더 어려운 두 번째의 문제는 역사작동 메카니즘에서의 차별적 분석이다. 역사의 인과분석에서 여성이 적절히 포착되고 있지 않으며, 성차별의 메카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 메카니즘이 다른 차별적 역사작동을 교묘하게 내포하고 있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일 근대사의 경우, 여성의 비가시화가 한일 양국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성차별의 메카니즘은 두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는 매우 본질적인 민족 차별의 기제를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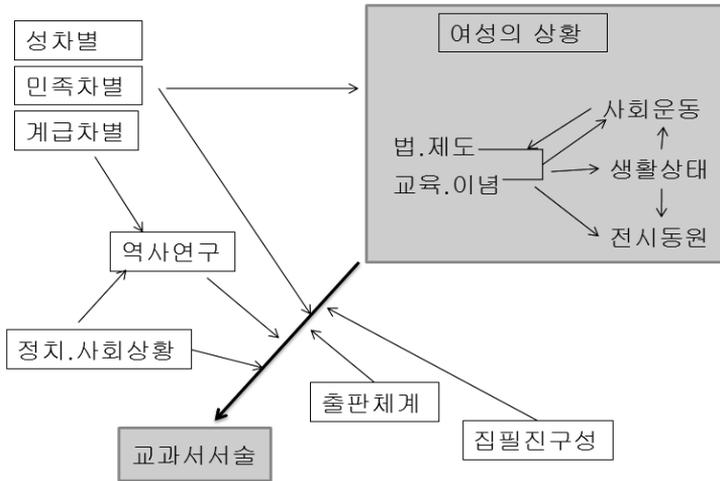
이 글은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 부분에 집중한다. 양국 모두에서 역사 전반을 극도로 함축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젠더편향을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의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및 신분구조의 변화에 대체로 침묵하며, 근대사회에서 의식과 신분구조 변화의 핵심을 이루는 젠더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이러한 양국 교과서의 젠더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법·제도 부분과 교육 및 여성 역할에 대한 이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로 나타나지만, 앞의 두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여성의 생활상태와 사회운동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의 근대사에서 특수하게 형성된 전시하 여성동원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근로동원과 성동원으로 집약되는 이 전시동원은 앞의 여러 여성 조건의 결과이면서, 넓게는 전반적인 민족·계급의 조건들과 맞물려 있으며, 정치·사회적 상황에 구속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진전된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에서는 한말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통해 이루어진 두 나라의 상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이 부분이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사회변화가 투사되어 결과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교과서 서술에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과 여성의 조건을 예민하게 반영하면서 변화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시 여성동원을 별도의 장에서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이다.

1. 젠더 편향 교과서 서술의 메카니즘

이러한 젠더관계의 변화와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성을 결과한 여러 요인(사회전반의 가부장적 사고, 교과서 출판 체계 및 집필진의 구성 등)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곧바로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와 젠더편향 서술 구조의 논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림 1〉 젠더 편향 교과서 서술의 메카니즘

2. 분석 교과서 자료

이 글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일본: 東京書籍¹⁾, 한국: 국정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일부 참고했다. 최근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적어도 세 시기 이상의 교과서를 분석했다.

1)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채택률이 2007년에는 51.3%에 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한론과 강화도사건, 조일수호조규에 관하여 2007년 사용되고 있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현명철(2007, 117·146)은 동경서적 교과서가 기술상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중학교	1990년 국사(하) (교육부) (A0) 1997년 국사(하) (교육부) (A1) 2002년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A2)	1996년 김정 (東京書籍: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B0) 2001년 김정 (東京書籍: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B1) 2005년 김정 (東京書籍: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B2)
고등학교 (*참고자료)	1990년 국사 (교육부) 1996년 국사 (교육부) 2002년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1998년 김정 (東京書籍) 2003년 김정 (東京書籍) 2007년 김정 (東京書籍) * 기타 다른 출판사 교과서

Ⅱ. 전반적인 여성의 비가시화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 근대사 부분에 여성의 언급은 사진을 포함해도 매우 적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교과서에 비해 여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많다. 이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여성이 언급된 곳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²⁾ 이에 관해 한일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것이다.

1. 한국 교과서

1990년과 1997년 교과서에 여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일단 모습이 없으니, 서술에서 쟁터관계에 대한 정당한 분석이란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90년보다도 1997년 교과서의 여성 서술이 더 후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2년 교과서에 여성서술이 대폭 늘어나는데, 그것은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갑오개혁과 동학 등에서 주장하는 법·제도 개혁의 성평등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것, 둘째,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를 중요하게 보여준다는 점, 셋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기했다는 점이다. 세 시기 교과서 모두에서 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서술은 없다.

2) 아래 표에서 여성 언급횟수는 사진, 각주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인한 다소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	여성 언급횟수	법·제도	교육· 이념	사회운동	생활 실태	전시 동원	기타
1990년	12	독립신문 창간사, 임시정부헌장	제국 신문, 숙명/진명	제암리, 신여성, 사진 : 물산장 려, 농촌계몽, 브나로드		전시 동원	민씨 사진:명 성황후
1997년	10	독립신문 창간사, 임시정부헌장	제국신문	제암리, 신여성, 사진:물산장 려, 농촌계몽, 브나로드		전시 동원	민씨
2002년	22	갑오개혁, 동학, 독립신문 창간사	이화/정신, 이화학당 사진, 제국신문	국채보상운동, 유관순, 근우회 사진 : 윤희순, 서당, 국채보상 운동비, 국채보상운동여성운 동비, 유관순, 유관순생가, 조 선민립대학기성회창립총회, 물산장려, 브나로드, 농촌계몽		근로정신대/ 위안부, 위안소사진	명성 황후

2. 일본 교과서

한국 교과서가 2002년 여성서술을 대폭 늘린 데 반해서, 일본 교과서는 최근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성의 등장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래 정리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것은 구미, 중국, 조선 등을 포함한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 줄어들고 일본 중심의 역사서술로 방향이 바뀐 것, 생활실태에 대한 기술이 줄어든 것,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전시 강제동원에 대한 기술이 삭제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교과 서	여성인 급횟수	법· 제도	교육·이념	사회운동	생활실태	전시 동원	기타
1996	35	1945년 보통 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 정기여자교육, 취학을 사진: 소학교, 유학 생, 학교	岸田俊子, 奥謝野晶子 (2회), 부인 운동, 靑靑 社 사진: 신 부인협회,	여성직장, 전쟁 의 희생, 사진:富 岡제사장의 여 공, 대중잡지, 버 스걸, 긴자여성, 쌀배급받는 여성	위안부, 여학생 동 원, 疏開 사진: 여 학생동원	미국여성해방운동, 구미의 여성 직장진출, 보통선거권 소개, 안네의 일기 사진 : 미국 흑인노예, 아메리카이 민, 조선여학생수업, 黒田 清輝그림 ‘독서’, 미국의 부인참정권운동, 유관순상, 3·1운동, 5·4운동
2001	31	1945년 보통 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 정기여자교 육, 취학을	奥謝野晶子 (2회), 부인 운동, 청답 사, 고아원	여성의 양장 사 진, 그림: 근대 일본여성, 제사 장의 여공, 大阪	여성노동 동원, 여성희생	구미의 여성직장진출, 보통 선거권 소개, 안네의 일기 사진: 조선여학생, 黒田清 輝의 그림 ‘독서’, 미국 부

			사진: 소학교, 유학생(津田), 대정기학교	사진: 신부 인협회,	방적공장, 대중잡지, 버스걸, 아나운서, 여성집원모집	인참정권운동, 유관순상, 5·4운동
2005	26	1945년 보통선거권	소학교, 근대 여자교육, 대정기여자교육, 취학을 사진: 소학교, 유학생(津田)	岸田俊子, 興謝野晶子, 부인운동, 청답사 사진: 신부 인협회,	사진: 富岡제사장의 여공, 大阪 방적공장, 製絲 여공, 대중잡지, 버스걸	여성의 노동력, 여성희생 포스터

3.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여성에 대한 서술이 매우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일본교과서의 여성 서술이 한국교과서에 비해 많다.
- 2)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가 점차 젠더관점을 강화시키는 데 비해, 일본 교과서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외국사례에 소홀한 한국의 교과서 성격을 감안할 때 (다음 3항에서 언급), 각기 자국 내의 역사서술에서 국한해보면 더욱 일본의 여성관점 약화가 주목된다.
- 3) 일본의 교과서는 외국의 사례를 점차 줄여갔으며, 한편 한국의 교과서는 아직도 거의 전적으로 한국 중심이다.
- 4) 한국 교과서는 여성언급을 주로 사회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비해 일본교과서는 여성의 일, 직장,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유의하여, 전체 여성의 삶을 서술하는 구조를 띤다.
- 5)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포함한 전시 여성동원 문제가 한국교과서에 2002년에 중요하게 기술되기 시작한 데 비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2001년부터 사실상 삭제되는, 양국 간에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

Ⅲ. 젠더 편향 서술의 구조

한말 개화기에 사회변혁이 시도되는 가운데서 신분제도의 변화는 그 근간을 이루며,

가족제도(호주제, 상속제 등 포함) 변화와 맞물리며 여성의 법적 지위를 결정지어 나갔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像 또는 성 역할 이념의 형성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받쳐졌다. 물론 이 여성상의 내용이 정부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대화와 식민지화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대응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의 객관적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 여성은 자신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사회운동을 만들어가기도 했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저변에서 여성 전체가 처한 상황, 특히 여성 인권의 침해 상황은 이 시기 젠더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드러난다. 이러한 객관적 사회조건과 여성의 현실은 1930년대 말 전시 동원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 부분을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1. 신분 및 가족제도 변화

신분제도의 폐지는 봉건적인 구속에 갇혀있던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신분제도 폐지 자체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한일 양국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매우 소략하다.

일본의 1996년 김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東京書籍)는 구미의 사회변화를 설명하면서 신분제도의 폐지, 인권선언, 농노해방, 노예해방과 여성해방운동을 소개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군이 남녀 평등한 토지 분할을 주장했다는 것을 소개했다(B0:162-177). 2001, 2005년 검정판에서도 구미의 인권선언 등을 소개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들고, 신분제 폐지나 남녀평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서술도 약해졌다(B1:123; B2:124-129).

일본교과서에서 근대 일본의 신분 및 가족제도에 관한 기술은 다음의 한 부분 뿐이다. “메이지유신 후) 정부는 천황을 으뜸으로 해서 … 四民平等을 제창하여 에도시대 이래의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평민은 이름(名字)을 갖고 華·士族과 결혼이 가능해졌으며 … 거주지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 것이다 …”(B0:193-4). 2001년 검정판은 미세하게 다르다. “신정부는 천황을 으뜸으로 해서 … 황족 이외에는 모두 평등하게 하기 위해 … 신분제도를 폐지했다(이하 동일)”.(B1:123). 2005년판은 2001년판과 동일하다(B2:139).

그러나 여기서 평등이란 남성 내에서의 평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해방령과 같은

해(1871년)에 설립된 호적법에 대한 기술은 없다. 호적법은 1898년에 시행된 민법과 더불어 이에(家)제도를 확립하고 장남을 호주로 하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반을 만들었다.³⁾ 여성에 대한 법적 무능력자 취급은 1925년 11월에 개정되어 재산권이나 신체구속, 결혼 등의 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나,⁴⁾ 같은 해 보통선거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여성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세 교과서 모두 1945년에 25세 이상의 남녀가 보통선거권을 갖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B0:239;B1:159;B2:177). 여성 관련 법제도에 관한 유일한 서술이다.

근대화를 진척시킨 일본과 달리 한국의 개혁은 좌절했다. 한국 역사교과서는 실패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990, 1997년 교과서는 이러한 설명 중 여성 시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2년 교과서에서 대폭 삽입되었다. “갑오개혁은 … 갑신정변에서 개화파가 제시하였거나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들이 주장하였던 신분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서술하면서,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갑오개혁에는 사법권 독립, 조세의 금납화 등과 더불어 동학농민운동, 조혼금동, 과부의 재혼 허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는 ‘노비문서를 불태워 없앤다’를 포함한 12개의 개혁안 중에 젊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A2:211-214). 그러나 실제로 추진을 시도했던 1896년의 호적제도 정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강영심, 2005:204-205). 한국은 이러한 개혁 추진에 실패하고 식민지의 길로 몰락했다.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정책과 일본군에 의한 시해사건은 중요한 역사로서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다. 그 시기에도 사회개혁의 시도가 지속되어, 독립협회의 활동에도 남녀평등의 이념이 있었는데, 역사교과서는 《독립신문》 창간사 내용 중에 “... 이 신문은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음 ...”을 보여주었다(A0:75; A1:96; A2:225).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 일본의 여러 법제도가 이식되었다. 일본 민법의 이식도 이루

3) 일본의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호주의 막강한 권한을 특징으로 한다. 1871년 호적법의 공포로 인해 일본의 국민은 호주를 대표로 해서 하나의 이에(家) 단위로 등록되었다. 1898년에 시행된 민법은 호주와 장남의 권리를 강조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징을 가졌다. 호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이에 제도는 가부장인 호주에게 여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국가의 가부장인 천황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천황제 국가체제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2005, 29~32).

4) 강영심, 2005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의 법적 지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한일관계사연구논집9)》 191~192

어졌다.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와 특히 여성의 지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의 교과서에는 서술이 전무하다.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의 법적 확인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1909년 한국의 호적을 근본적으로 일본식으로 바꾼 민적법의 공포로 한말에 시행되었던 호구조사규칙은 폐지되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 1922년 일본호적법을 반영한 조선호적령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식 호적제도가 이식되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질서에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혼인연령 제한(1922), 적장자 단독상속 등의 일본식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 법은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1939년의 창씨개명으로 이어졌다(강영심, 2005:205).

법제도의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공창제의 수립이다. 일본에서는 1872년에 창기해방령을 선포했으나 다음해인 1873년에 도쿄부에서 <貸座敷渡世規則>, <娼妓規則>, <藝妓規則>을 공포하여 창기의 법적 유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남성이 사고 여성이 파는 성매매는 공인되고 창기는 호주가 대표하는 법적 구속과 전차금에 묶여 인신매매와 인신구속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공창제가 1876년 강제개항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 집주지역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16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제시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여성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전시 동원과 해방 후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까지 연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한일 양국 교과서에 없다.

한국교과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한말의 개혁시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일본 제도의 이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식민성과 근대성이 결합된 사회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단절과 여성이라는 큰 집단의 변화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

2. 교육 및 현모양처 이념

법제도의 틀에 내용을 채운 것이 교육과 이념이었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술하고 있으나, 여성교육이라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소략하다. 또한 봉건적 여성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이 없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일본교과서가 할애하는 지면이 적다. “정부는 1872년에 학제를 발표해서 6세 이상 남녀 모두가 소학교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서술과 함께 여학생 수업 사진이 나와 있다(B0:197; B1:124-5; B2:140). 메이지정부가 岩倉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

는데 동행한 5명의 여자유학생 실렸는데(B0:202), 2001년과 2005년 교과서에는 그중 최연소가 津田梅子임을 밝혔다(B1:132; B2:148).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서술하면서 여학생의 학교수업 장면 사진이 실려 있으며(B0:221; B1:145; B2:160), “(1900년대 초) … 여자교육도 중시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B0:225; B1:148; B2:165).

“大正기에는 … 여자의 중등·고등교육도 충실하게 되었다”(B0:243), “남녀 모두에게 중등·고등교육이 충실하게 되었다”(B1:162), “여자교육의 충실을 도모했다”(B2:181)고 서술했으며, 1875~1910년간의 남녀취학을 그래프가 소개되고 있다(B0:225; B1:148; B2:165).

한국의 교과서도 한말의 근대 교육 보급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교육을 언급한다. 1990년 교과서에 “1905년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보성 … 숙명, 진명 등 수많은 학교가 세워져 …”(A0:94)의 여학교에 대한 기술은, 1997년에 단지 “1905년 이후 보성, 양정 등을 비롯한 …”(A1:101)으로 바뀌어 사라진다. 2002년에는 “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 여학교 … 등을 세워 신학문과 서양 문화 및 영어를 가르쳤다”(A2:245).

그러나 한말에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운동이나, 174개교에 이르는 사립여학교⁵⁾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놀랍다. 더욱이 일제시기에 들어 이 한국인에 의한 학교들이 어떻게 총독부에 의해 장악되면서 새롭게 여성교육기관이 만들어졌는지, 교육의 내용은 어떠하며 남성 교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서술도 없다.⁶⁾

단지 1990년 교과서에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정신의 고취와 국민계몽에 힘썼다”(A0:93)는 언급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2002년 교과서에 조금 부연하여,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행되었는데, 한글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국민계몽과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한 논설과 기사가 실렸다”(A1:100; A2:247)고 서술했다.

여성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기 사회변화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근대 여성교육의 목적은 국가발전이었다. 한말 개화기에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조선에 개화하려면 여성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학교는 ‘국민’을 만드는 교육기관이었다. 일제시기에 한국은

5) 1886~1910년 사이에 설립된 여학교 수. 이 시기 전체 학교수는 2,250개였다.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2005, 104)

6) 총독부는 1915년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사립학교규칙을 발표했으며, 공립학교 증설정책을 추구했다.

일본의 교육이념이 받아들여져 천황의 ‘臣民’을 만드는 교육을 실시했다.⁷⁾ 여성교육 이념의 성격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메이지 정부는 초등교육 이상의 단계에서는 남녀분리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의 고등보통교육에서 수산, 가사, 봉제 등의 과목을 중시했다. 한말 한국에도 여학교가 분리 설립되었으며, 일제시기에 관공립여학교는 총 수업의 절반 이상을 재봉, 수예 등에 배당했고, ‘고등여학교규정’에는 여자교육 목표를 ‘양처현모로서 의 자질을 얻게 함으로서 총량 지순한 황국여성을 기르는 것’이었다(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2005:101-105).

3. 사회운동, 여성의 활동

이러한 법제도 및 교육에 대하여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한 이러한 법제도 및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기도 했을까. 사회운동의 여성참여, 여성운동의 양상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근대화 과정에 사회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성운동도 그 한 부분을 점한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여성운동 및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단 세 곳이다. 1996년 교과서에 만화로 처리된 岸田俊子は “자유민권의 주장은 멋지지만 정치는 남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다. 남녀평등을 말할 수 있다면!” 이라고 외친다(B0:209). 2001년 판에는 이 부분이 없어졌다가, 2005년 교과서에는 ‘민권운동가 岸田俊子’의 초상화가 설명 없이 실려 있다(B2:151).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러일전쟁 시, 출병한 동생을 그리며 쓴 興謝野晶子の 시 전문이 1996년과 2001년 교과서에 실렸는데(B0:218; B1:142), 2005년에는 시의 제목만 나와 있는 대신 사진과 설명이 실려 있다(B2:158). 이 여성은 1996년과 2001년에 문화 논의에서 短歌 작가로 다시 한번 소개되었으나(B0:226; B1:149), 2005년판에는 없다. 1996년과 2001년 교과서에 黒田清輝의 ‘독서’라는 제목의 한 여성 그림이 실려 있다가(B0:227; B1:149), 2005년 교과서에는 문학과 예술 항목 자체가 없어졌다. 1996년, 2005년 교과서는 모두 구미의 여성 직장 진출과 참정권 운동을 소개했으나(B0:235; B1:155; B2:173), 1996년 교과서만 유관순상과 여성들의 3·1운동 참가 사진과 여성이 참가한 중국의 5·4운동 사진을 실고 있다(B0:236; B1:157). 2005년 교과서에는 이러한 운동을 소개했으나 여성 언급과 사진은

7) 1911년 조선교육령, 1922년 개정. 황국신민서사

없다.

일찍이 메이지시대에 고아원을 세우고 지원자를 넓혀간 石井十次의 활동과 고아원에서 일하는 여성의 사진을 2001년 교과서만이 실고 있다(B1:149). 1996, 2005년 교과서가 동일하게 1차 대전 후 사회운동의 확산을 논의하면서 “여성차별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부인운동’도 성했다. ‘새로운 여성’을 목표로 해서 메이지 말에 세토샤(靑鞆社)를 결성해서 여성해방을 제창한 히라츠카라이쵸우(平塚雷鳥)는 신부인협회를 건설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의 자유, 여자고등학교의 확충, 남녀공학, 모성보호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또 사회주의의 입장에서의 부인운동을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세토샤 선언의 일부와 신부인협회 제1회 회의 사진도 실고 있다(B0:241; B1:161; B2:179).

한국근대사는 자주적 개혁의 시도가 외세의 침략에 패배한 역사이다. 그 과정은 또한 정부와 외세, 식민정부에 대항하여 개혁의 의지를 표현한 한국인들의 사회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교과서는 동학혁명으로 시작하여 의병운동,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을사조약반대투쟁, 애국계몽운동, 신민회, 국채보상운동, 이후 3·1운동을 비롯한 민족독립운동, 민족실력양성운동, 학생운동, 교육운동 등등, 사회운동에 관해 많은 논의를 전개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업적들은 의병운동을 포함하여 이 사회운동들에 여성들이 중요하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다른 한편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운동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과 1997년 한국 역사교과서의 수많은 지면에 걸친 사회운동 논의에서 여성은 본문에는 단 두군데 보인다. 2002년 교과서에 이르러, 1990년과 1997년의 교과서에 실린 서술에 더해, 여러 여성 관련 서술이 추가되었다. 여성의병 윤희순의 사진과 설명(A2:238), 유관순의 항일운동에 대한 서술과 사진들(A2:267-268), 그리고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A2:287)가 논의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에 관해서, “돈과 비녀 등을 성금으로 냈다”(A2:249)는 서술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같이 서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비’ 사진(A2:242)과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 사진(A2:249)을 실었다. 민립대학기성회 창립대회에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A2:283)도 주목할 만하다. 제암리 독립운동에서 어린 소녀와 부녀자들의 참가와 그에 대한 탄압에 대해 쓴 켄달이라는 외국인의 기사가 1990, 1997년 교과서에 실렸다가 2002년에 없어진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A0:123-4; A1:130-1). 여성들의 참가 사실에 더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치욕적 대우라는 명백한 성차별에 대해, 한국교과서의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2년 교과서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여성 서술이 대폭 늘었으면서도, 그것이 젠더의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지위 변화에 더해 사회전반의 개혁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후에 여성운동에 중요한 씨앗이 된 신여성에 대해서는 1990, 1997년 교과서에 천도교에서 ‘신여성’ 잡지를 발간했다는 언급 (A0:144; A1:154)이 설명 없이 있다가 2002년 교과서에서는 없어졌다.

한일 양국에서 사회운동 서술은 여성의 비가시화와 사회변화에서 젠더관계의 중요성이 무시된 대표적인 부분이나, 2002년 한국교과서에 다소 보충된 것은 고무적이다.

4. 생활상태

법제도 및 교육, 이념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여성운동과 여성동원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가 정치적인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의 생활 상태에 관한 서술은 적다. 그래도 일본교과서는 여성 전반의 삶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정치적 풍랑 속에 있던 한국의 교과서는 여성의 생활상태에 관한 기술이 거의 전무하다.

일본의 교과서는 근대산업 발달을 논의하면서 ‘富岡製絲場の 여공’(B0:198; B1:127; B2:142)을 실었으며, 여성이 등장한 잡지 표지를 실었다(B0:243; B1:163; B2:181). 또한 1996, 2001년 교과서는 버스걸과 전화교환수 등 새로운 직장에 여성이 진출했고, 여학생의 제복에 양장이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들 사이에 양장이 퍼졌다고 서술하며, 버스걸의 사진을 실었다(B0:244; B1:163). 2001년 교과서는 제5장 ‘개국과 근대일본의 발자취’의 시작 표지에 양장의 남녀를 등장시켰으며(B1:111), 새로운 여성 직업인 아나운서의 사진과(B1:163), 만주에서 점원모집에 참가한 여성들의 사진도(B1:167) 실었다.

1996년 교과서는 전시에 “생활이 곤란했으며 … 군수물자의 생산이 우선시되어 식료품이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다”(B0:262-3)고 기술했으나, 2001년, 2005년 교과서에는 이러한 전시하 생활실태에 대한 서술이 전부 빠져있다. 안네의 일기가 교과서 모두에 실려 있다(B0:257; B1:173; B2:191).

한국의 교과서는 한말부터 일제시기를 통하여 농민의 생활이 곤란해진 상황을 기술했으나, 여성의 상황에 별도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A2:290). 나혜석, 윤심덕과 같은 여성의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인신매매가 공창제의 한반도 도입과 더불어 구조화 되어 경찰의 방관 하에 확산된 것은 호주제 하에서 교육과 직업의 기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식민지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에 전시 여성 강제동원을 용이하게 한 배경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서술도 없다.

IV. 전시 여성동원: 일본군 위안부 서술의 성·민족·계급 편향의 교착

앞서의 여성관련 서술에서 간간히 보였던 성과 민족, 계급 관계의 교착이 전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서술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 여성동원의 전체적 양상과 근로정신대 동원

전시동원기에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여학생의 동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양상이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일반 여성의 동원은 근로동원에 그쳤으며, 근로동원에서도 모성보호가 세심하게 이루어진데 비해, 한국에서는 성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근로동원에서도 모성보호 정책은 발견하기 힘들다.⁸⁾

일본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강제노동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으며(B0:263-4), 여성들에 대해서도 근로동원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별도 서술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학생도 공장 등에 동원되었다”는 기술과 “교실도 군수공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학생들이 교실에서 일하는 사진을 실은 것이 전부이다(B0:268). 그러나 2005년 교과서에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많은 희생을 했다”(B2:193)는 소략한 기술로 대체했다.

8) 여순주, 1994 ; 정진성, 2004 참조.

2.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1) 일본중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1980년 검정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중, 清水書院과 帝國書院의 교과서가 조선인, 중국인의 강제연행에 관해 기술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술은 한 곳도 없었다. 1992년 검정 교과서는 일본서적을 제외한 다른 7개의 교과서가 모두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대만인에 대한 징병을 기술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2종의 교과서에서 명백하게 군위안부 동원을 나타내는 기술이 등장했다. 中教出版 교과서는 강제연행 전반을 기술하면서, “군을 수행해야 했던 여성도 있었다”(258쪽)고 기술했으며, 教育出版은 “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273쪽)라고 기술했다. 이 두 교과서의 기술은 군을 수행했다거나, 싸움터로 보내졌다는 것으로 보아, 위안부임에 틀림없다. 특히 교육출판의 ‘정신대 명목으로’ 라는 기술은 매우 흥미롭다. 1997년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151)는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위안부 동원 사실을 많은 한국인이 ‘정신대’ 동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해방 직후, 1970, 80년대에 걸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소에 끌려간 여자들’에 대한 회고가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⁹⁾ 1990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직후에 일본에서 쓰여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이 기술은 일본사회의 인식도 한국과 유사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大阪書籍의 “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 강제 동원했습니다”(262쪽)의 정신대도 다소 희미하게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동시에 포괄하는

9) “이 땅의 딸들을 여자정신대 혹은 위안부대라는 미명으로 일본은 물론 멀리 중국 남양 등지에 강제로 혹은 기만하여 보낸 사실을 …”(《서울신문》 1946. 5. 12). “일제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술한 부녀자들을 동원. 군수공장의 직공이나 전방부대의 위안부로 희생시켰다”(《서울신문》 1970. 8. 14). “나는 조선에서 정신대제도가 생겨서 동포여성들이 강제로 끌려오고 있는 것은 미처 몰랐지만, 위안소의 그 보지 못한 동포에 대해서 한없이 동정심이 일어났다”(박두석, 1977).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 나가 그중 상당수가 일본군대의 위안부로 만들어진 인원이었다”(김대상, 1978). “한국 처녀들이 정신대로서 본격적으로 징발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1월 이후지만, 누구도 그녀들이 일본군대의 위안부가 되리란 것을 상상도 못했다”(임종국, 1981, 196).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1996년에는 1992년까지의 學校圖書 교과서가 없어지고, 中敎出版은 日本文敎出版으로 관권을 양도했다(君島和彦, 1997:308). 모두 7종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었는데, 모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언급하였다.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시 하에)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조사하게 되었다.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어린 여성도 다수였다”(B0:263).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기하여 강제동원임을 명백히 밝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다른 교과서 내용은 <첨부자료1> 참조).

그러나 2001년 검정본에는 日本書籍과 清水書院, 帝國書院 교과서에만 위안부 기술이 남았고, 나머지 모두에는 없어졌다. 채택률 1위인 東京書籍 교과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전장에서 죽기도 하고, 노동에 끌려 나오기도 하여,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B1:175)라고 위안부와 강제연행 모두를 삭제했다. 채택률 2, 3위인 大阪書籍과 敎育出版에도 일본군 위안부 서술은 빠져 있다. 특히 敎育出版과 日本文敎出版(中敎出版) 교과서는 이미 1992년에 가장 먼저 군위안부 사실을 교과서에 실었던 교과서였는데, 2001년에 서술을 빼버린 것이다.

日本書籍은 가장 충실하게 위안부 사실을 기술했다.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여져 일본병사의 위안부로서 戰場에 보내졌다.”(180쪽) 이 교과서에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서술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의 사진도 실었다.(205), 清水書院과 帝國書院 교과서도 위안부 사실을 기술했다(각각 189, 221).¹⁰⁾ 2001년에는 扶桑社의 역사교과서도 검정 통과했는데, 0.04%의 낮은 채택률과 그 서술의 극단성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¹¹⁾

2005년 검정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더욱 축소되었다. 日本書籍新社와 帝國書院 2종에만 위안부 서술이 남았고, 清水書院 교과서마저 서술을 없앴다. 내용도 약화되어 日本書籍新社의 서술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 강제적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 [“또한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

10) 일본역사교과서 전문가 분석팀, 200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검토의견서(Ⅱ) - 기존 7종 교과서 > 참조.

11) 이것은 2005년에 0.39%로 올라갔다.

의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습니다”(180쪽). →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 병사를 위해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모집되어 전장으로 보내졌다.(202쪽)
 명백히 위안부 기술은 1996년 이후 축소 일로에 있다.

2)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2003/2007년 검정판)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서술 또한 중학교 교과서와 별로 차이가 없다.
 2006년도 검정에서 전체적으로 검정의견은 윤리교과서 한 개(實敎出版)의 전후보상 서술에 대한 미미한 의견이 전부였다.

2006년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과 교과서 수정문

과목	검정수리번호/출판사	원문	검정의견	수정문
倫理	18-70 實敎出版	<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중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전후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	전후보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전후 보상 >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중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2007년 해산).

출처: 남상구, 2008, 331~332에서 재인용.

이때의 검정의견은 1건에 불과했지만, 여타 출판사의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 각 출판사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2007년 교과서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2003년 교과서의 ‘위안부’ 내용을 수정한 검정본을 2006년에 제출했다.¹²⁾ 그 수정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축소되었다. 위안부 동원 사실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2003년 검정판으로는 第一出版 《高等學校日本史A》와 山川出版社 《新日本史》 두 개에만 기술되었는데,

12) 2008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조사한 자료. 279~284쪽. 이외에 2007년도 검정통과한 일본사, 세계사 고교 교과서 분석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7 참조.

2007년에는 山川 《新日本史》만 그대로 남아있고, 第一出版 《日本史》는 강제연행 기술을 빼버렸다.¹³⁾

둘째는 2007년에는 위안부 동원과 함께 거의 모든 교과서에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한 서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해 서술한 교과서는三省堂 《日本史A》와 實教出版社 《高校日本史B》 두 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위 두 책에 더해, 第一 《高等學校日本史A》와 東書 《日本史A》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東京書籍, 清水書院, 實教出版, 第一學習社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모두 실렸다.

3) 일본교과서 위안부 서술 변화의 메카니즘

가. 젠더/계급/민족차별의 역할

앞서 언급한대로 역사서술의 젠더 편향은 계급과 민족 편향서술과 맞물려 그 메카니즘이 숨겨져 있기 쉽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서술은 어떠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민족/계급 차별 구조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제도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엄청난 문제가 60년이 지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비롯한 성차별적 사회의 요인이 크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민족문제의 시각에서만 접근되어 왔으나, 앞서의 논의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서술 및 일반대중의 생활에 대한 시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①여성의 가시성 후퇴

이 글의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대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1996, 2001, 2005년을 통하여 여성 서술의 횡수가 줄어들었다.

②일본 자국 중심의 서술

위안부 서술 축소와 함께 2001년 검정판에서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자국 중심의

13) 第一出版은 2003년판 교과서에는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해서 종군위안부로 삼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었는데, 2006년 검정본에서 “강제연행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라고만 기술했던 것이다.(남상구, <앞 논문> 332)

서술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식민지에 대한 서술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할애한 지면이 대폭 줄어들고 일본 중심의 역사로 좁혀진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교과서의 章 구성 자체 변화에서 그것이 보인다. 1996년 검정 교과서의 목차는 문명의 발생과 일본의 성립, 고대국가의 발전과 동아시아세계, 중세사회의 전개와 동아시아 정세, 세계의 움직임과 천하통일, 근세사회의 발전, 근대유럽의 세계지배와 일본의 개국, 근대일본의 발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현대의 일본과 세계의 9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2005년 검정판에서는 역사의 흐름, 고대까지의 일본, 중세의 일본, 근세의 일본, 개국과 근대일본의 발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일본, 현대의 일본과 세계의 7장으로, 완전히 일본 중심으로 개편한 것을 볼 수 있다. 근대사 부분은 3장에서 2장으로 압축되어 세계사, 식민지 부분과 일반국민의 생활사가 대폭 축소되었다. 장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세계에 대한 관심의 폭을 줄이고 일본 중심으로 서술이 좁혀진 것을 볼 수 있다.

③ 생활사 소홀의 역사서술

이에 새 교과서에는 ‘전시하의 생활’이라는 항목이 통째로 빠져서 이전 교과서에 실려 있던 강제연행 전반에 관한 서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대한 기술도 대폭 축소되었다. 1996년 검정판에서 “전투와 강제연행 등에 의해 많은 인적 피해가 났으며 …”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서 …”(B0:263)와 같은 서술과 한 페이지(B0:264) 전체에 걸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제목 하의 자세한 서술은, 2001년 검정판에는¹⁴⁾ “일본과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해서 본국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 중국인 등의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았으며 극히 힘든 생활을 했다”(B1:175). 2005년 검정판에서는 “일본에 끌려와서 의사에 반해 일한 조선인, 중국인도 있었고, 그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고 매우 혹독한 생활을 했다”(B2:193)는 단 3줄의 서술로 축소되었다. 양의 축소와 함께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정부 중심의 서술

이와 함께 주목할 또 다른 점은 1996년 검정판에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했다”(B0:262),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되어 비판한 사람들은 탄압당했다”(B0:263)를 비롯한 국민들의 전시 하 생활에 대한 서술이 180도로 방향이 바뀌

14) “일본과 독일은 …” “유럽에서는 독일에 의해 …”와 같이 독일을 끌어들인 것이 특이하다.

어, 2001년과 2005년 김정판에는 “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은 ‘바른(正しい) 전쟁’이라고 믿어, 정부에 협력했다”(B1:174; B2:193)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나. 정부와 사회: 지도, 검정과 자기검열

일본에서 위안부 서술과 전쟁 중의 식민지 및 일본의 일반 대중의 삶에 대한 서술을 줄이고, 미화시키는 요인은 역사학 또는 역사교육 내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三宅明正, 1997/1998:31), 그 외부의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보다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① 학습지도요령

일본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 관여는 학습지도요령을 만드는 것과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에 처음 발표된 후, 중학교의 경우, 1951년 1차 개정으로부터, 1955, 1958, 1969, 1977, 1989, 1998년, 2008년 제8차 개정에 이르렀다. 이에 관해 일본과 한국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군위안부 서술과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과의 목표’ 변화에 관해 서만 짚어보기로 한다.

다음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¹⁶⁾ 1947년과 1951년 민주주의의 강조가 1955년 크게 방향이 바뀌어, 서구식 민주주의에 유의하고 도덕교육을 강조하게 된 점과 이후 차츰 세계사의 비중을 줄이고 자국 중심 역사교육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점, 그리고 1998년부터는 국가에 대한 애정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된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학습지도요령의 변화는 교과 구성과 내용을 결정하며,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이나 구체적 내용변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기술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지도요령에서 전쟁관이나 젠더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5) 永原慶二는 일본정부의 검정의 역사관을 자국역사의 미화, 전쟁책임의 은폐, 민중행동에 관한 기술 억제 및 교화형 역사교육으로 분석한 바 있다. (永原慶二, 2001, 19~29)

16) 1998년 제7차 개정까지는 김보림(2000), 박수철(2008), 권오현(2008)을 주로 참조. 2008년은 문부 과학성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을 참고했다.

사회과(역사분야)의 목표

1947	민주적·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서 ... 자질의 기초를 함양
1951	민주적 사회인으로서의 ...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 일본사회발전을 항상 세계사의 배경 아래 이해하며 아울러 일본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현재 사회문제를 세계사적으로 파악할 능력을 기를 것.
1955 1956(고)	*미국식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목소리 높아짐 → 학습지도요령 개정요구 애국심 함양과 도덕교육의 내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
1958 1960(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올바르게 이해시켜 그것을 통해 국가·민족의 전통과 일본문화의 특질 등을 생각하게 하여 우리들이 국제사회에 대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자각 시키고 국민적 심정의 육성을 도모한다. *국기계양, 기미가요 제창 중시
1968(소) 1969 1970(고)	우리나라의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기르면서 ...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임과 함께 ... *신화교육 부활과 애국심 교육의 강조
1977 1978(고)	넓은 시야에 서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공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양을 길러 ... *도덕강화와 기미가요의 국가 명기
1989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역사를 배경으로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을 넓은 시야에 서서 생각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 *도덕교육 충실, 일본인의 자질 육성 중시, 일본문화와 전통 강조, 국기·국가 존중지도
1998 1999(고)	우리나라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하고 ... *애국심 함양 강조
2008	동일함

한편 학습지도요령을 해석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모든 교과서 회사가 교과서를 편집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사용한 해설서의 내용은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 이해시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교육의 실시방침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설서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 그 기술 내용은 편차가 생긴다. 2012년부터 사용하는 해설서에는 일본 국민이 입은 전쟁 피해로 오키나와전, 원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남상구, 2008:324~325).

②교과서 채택률과 자기검열

1955년 제출된 교과서의 전체 80% 이상이 불합격되도록 검정이 강화되었으나 (儀義文, 2001:66), 그 후 몇 차례의 진동을 겪으면서, 2005년도에 이르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서술에 대한 검정 의견은 없어졌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앞서 언

급한대로 2006년도 검정에서 전체적으로 검정의견은 윤리교과서 한 개(實敎出版)의 전 후보상 서술에 대한 미미한 의견이 전부였다. 정부의 검정의견 없이 각 출판사들은 자체적으로 2003년 교과서에서 2007년 검정을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내용을 수정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05년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식민지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었거나 내용이 수정된 것은 검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출판사 자체의 ‘자기검열’(自主規制)에 의한 것이었다(林博史, 2007:10). 2001년 검정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8월, 東京書籍, 敎育出版, 帝國書院은 당시 현행 교과서의 ‘중군위안부’ 기술에 대하여 ‘중군’과 ‘강제’의 어구를 삭제하는 自主訂正을 신청하고, 문부성은 동년 12월에 정정을 허가한바 있다(依義文, 2110:59).

이러한 자기검열의 현실적 이유로 교과서 채택률이 거론된다. 예컨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가장 우익 성향이 강한 扶桑社 교과서와 다른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가 모두 저조하다. 특히 일본서적 교과서의 채택률은 1997년 12.9%, 2001년 5.9%, 2006년 3.1%로 급감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그때까지의 서술 그대로를 유지한 大阪書籍, 敎育出版, 清水書院, 日本文敎出版 교과서는 대체로 채택율이 다소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세 중에 유독 채택율이 높아진 東京書籍과 帝國書院 교과서는 일본역사에 극히 비판적인 부분을 삭제하면서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교과서이다(藤岡信勝, 2005: 222-228). 특히 위안부 문제를 약한 톤으로 기술한 帝國書院의 교과서가 크게 채택률이 늘어난 것은 위안부 문제의 서술과 침묵 사이에서 중간을 택한 사람들의 선택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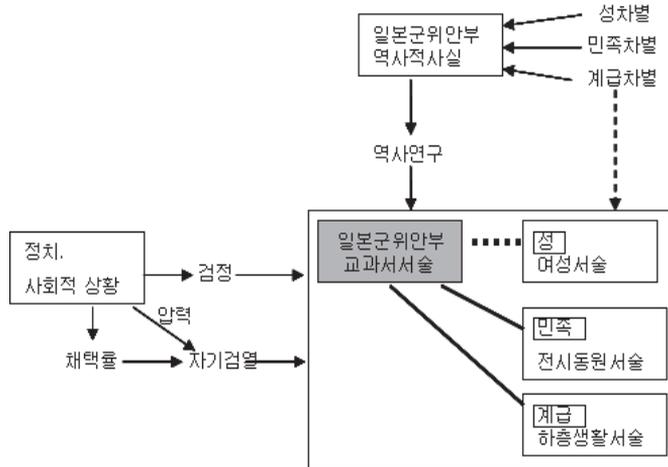
	1990년	1993년	1997년	2001년	2005년
東京書籍	35.0	32.2	●41.1	51.3	51.2
大阪書籍	16.3	18.0	●19.3	14.0	15.4
帝國書院	1.4	4.4	●1.9	●10.9	◎14.2
敎育出版	16.0	●17.9	●17.8	13.0	11.8
日本書籍(新社)	16.5	14.2	●12.9	●5.9	●3.1
清水書院	4.3	3.7	●3.4	●2.5	2.4
(中敎出版)日本文敎出版	8.7	●8.1	●3.5	2.3	1.4
學校圖書	1.9	1.3			
扶桑社				0.046	0.4

자료: 1990년은 舊學習指導要領版, 1993·1997년은 新學習指導要領版 ; 君島和彦, 1997, 308에서 재인용. 2001, 2005년은 일본문부과학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ikorea.ac.kr/webzine/0511/japan3.asp>에서 재인용.

● 군위안부 서술 ◎ 약한 서술

③ 정치·사회적 상황의 직접·간접적 압력

그러나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이며 더욱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東京書籍 교과서가 2001년도에, 앞서 본대로, 내용을 줄이거나 서술의 방향을 바꾼 것, 더욱이 중학교, 고등학교 각 출판사 교과서가 동시에 비슷한 내용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을 단지 채택률로 설명할 수 없다. 그 근본요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의 보수화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990년대 위안부 사실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1996년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 이후 점차 그 내용을 축소해 간 것은 다른 강제동원의 문제, 더욱이 앞서 본대로 여성 서술 전체의 축소, 자국 중심 서술과 궤를 같이하며 일본 사회 전체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⁷⁾



〈그림 2〉 일본교과서 위안부 서술변화의 메카니즘

그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을 추동하기도 하는 것이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이다. 하야시 히로부미(林博史)는 검정이라는 직접적인 방법 대신 사용된,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압력이 자주규제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아시아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한 기술에 검정의견이 붙으면 국제문제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 신청단계에서 기술을 줄이는 교묘한 방법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林博史, 2007:10).

17) 전반적인 교과서 내용 개정 중에도 ‘중군위안부’문제는 그 중심에 서있다. 일본의 우파 지식인들은 이것이 외국의 적의와 악의, 영미를 절대정의로 여기는 사상에 따른 것이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했다(西尾幹二·藤岡信勝, 1996).

정부 외의 정치·사회 집단의 압력도 중요하다. 1955년 전후, 1980년대 초,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보수집단의 압력은 교과서 내용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¹⁸⁾

3.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국교과서 서술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7년 국정교과서부터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1979, 1982, 1990년 국정교과서에서도 위안부 관련 서술이 눈에 띈다.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위안부를 의미하는 기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중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국사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대폭 보강되어 보다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①1979-1997년 교과서

우선 1979, 1982, 1990, 1997년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 내용을 보자.

위안부 관련 기술	
1979	중학교: 심지어는 젊은 여자들까지도 산업시설과 전선으로 강제로 끌려갔다.(239쪽)
1982	중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122~123쪽) 고등학교: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했다.(150~151쪽)
1990	중학교: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142쪽) 고등학교: 서술 삭제
1997(중)	중학교: 이때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151쪽)
1996(고등)	고등학교: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136쪽)

18) 이에 관해서는 儀義文(타와라 요시후미),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번역, 2001, 《위험한 교과서》 (역사비평사, 서울) 65~71 참조.

1990년대 초에 위안부문제가 한국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그러나 1990년대를 통하여 속속 밝혀지는 위안부 실상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따라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사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았다.

②2002년 교과서

2002년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위안부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였다”(A2:262) 고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과정은 중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 1973년 국정화 이후 관련 내용들이 한 두 줄에 걸쳐 서술되거나 또는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1982년의 교과서에서 “여자들까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하였다”(150~151)는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1990년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아예 그 서술조차 삭제되었고, 1996년의 교과서에 가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⁹⁾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는 민족의 수난과 항일 독립운동 항목에서 ‘일본위안부 실상’이라는 박스를 별도로 만들어 다음과 같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자료1>을 인용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2년 무렵부터 침략전쟁을 확대해 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방지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와 타이완 및 점령지역의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하였다.

이들은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한 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 …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나, 병약해진 몸으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343쪽)

19) 관련 기술은 위안부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기 쉽게 서술한 것도 문제이다.(이영선, 2004, 14~15)

2002년에 한국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크게 확대한 것은 일본의 2005년 검정 교과서에서 위안부 실상관련 내용이 축소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용이 확충된 것과 중요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에서 그것이 정치·사회적 상황의 보수화를 근본 요인으로 하며, 특히 민족관계가 그 축을 이룬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 위안부 서술이 확대된 것은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봉건사회와 구별되는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며, 그것은 신분제도의 폐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거대한 변화 중 하나의 근간이 여성의 사회적 출현이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이 점을 무시한 것은 반쪽의 역사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셈이 된다.

일본의 교과서가 한국의 교과서보다 여성에 대한 서술이 양적으로, 그리고 서술구조에서 다소 앞서 있다고 보여졌다. 그것은 근대화가 앞선 일본에서 여성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 진출하는 양상도 다분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가 점차 서술을 늘려가고 사회운동, 교육, 전시동원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데 비해, 일본 교과서가 오히려 서술을 줄이고 기왕에 실렸던 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은 정치·사회적인 상황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이러한 젠더 편향은 민족과 계급 편향과 맞물려 있으므로, 전체 사회 해석의 시금석과 같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교육이 이렇게 정치·사회적 조건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문헌

- 강영심, 2005,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의 법적 지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한일관계사연구논집9)》
- 국사편찬위원회, 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검정본) 한국관련 내용 시대별·주제별 분석 보고서> _____, 2001 <일본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일본하계의 연구성과 분석 보고서>
- 권오현, 2008 <일본역사 학습지도요령의 총론> (미발표 논문)
- 君島和彦, 1997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교과서(역사적 분야)의 검토> 《江原人文論叢》 5
- 김경일, 2008 <한일근대가족의 비교연구: 현모양처와 모성을 중심으로> (미간행논문)
- 김경일·임상선·정혜경, 2003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대상, 1978 <일제하 여자정신대의 비극> 《신동아》 4월호
- 김보림, 2000 <199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 (서울대 사회교육과 석사 논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2007년도 검정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집>
- 남상구, 2008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변화> 한일관계사학회 《韓日關係史研究》 30 _____, 2009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실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歷史教育論集》 43
- 박두석, 1977 <포로 없는 전쟁> 《실록 민족의 저항 3》 (한샘출판사)
- 박수철, 2008 <일본중학교 사회과(역사분야) 학습지도요령의 변화 분석> (미발표 논문)
- 박정애, 2002 <한국역사교과서를 통해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심포지엄, 《한일역사교과서를 통해본 전쟁과 여성》 발표논문 _____, 2008 <일제시기 인신매매의 구조와 성격> (미간행논문)
- 서민아, 2007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일제 강제여행' 서술의 현황과 내용분석>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주백, 2008 <현대사(근대사Ⅱ)>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선인)
- 여순주, 1994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아현, 2001 <역사교육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중앙대 역사교육학과 석사 논문)
- 이영선, 2004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교과서 서술과 문제점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찬희, 2001 <일본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역사교육논집》 26
- 이찬희·손용택·김복영·김형국, 1993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찬희·손용택·정영순, 1999 《일본·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찬희·손용택·정영순·임상선, 20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CR 2001-39) (한국교육개발원)
- 이찬희·임상선, 2002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CR2002-35) (한국교육개발원)

원)

- 이찬희, 임상선,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변화분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문부과학성, 2008 <중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
일본역사교과서 전문가 분석팀, 200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검토의견서Ⅱ - 기존
7종 교과서>
임중국, 1981 《정신대》(일월서각)
정재정, 2003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 《사학연구》 69
정진성, 2004 《일본군 성노예제》(서울대출판부)
千聖林, 2008 <새로운 여성사: 쟁점과 전망> 《역사학보》 200
俵義文(타와라 요시후미),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번역, 2001 《위험한 교과서》(역사비평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일본중학교 사회과교과서의 한국관련내용 변화분석>
_____, 2007 <한일역사교육과정 비교연구> (수탁연구 CR 2007-83)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 주관 심포지엄, 2005 <일본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지음,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29-32(한울아카데미,
서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7 <2008년도용 일본고교 역사교과서 분석: 2007년 3월 검정 통과본을 중심
으로>
현명철, 2007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 藤岡信勝, 2005 《教科書採擇の真相》(PHP新書, 東京)
西尾幹二·藤岡信勝, 1996 《國民の油斷: 歴史教科書が危ない!》(PHP研究所, 東京)
永原慶二, 2001 《歴史教科書をどうつくるか》(岩波書店, 東京)
三宅明正, 1997/1998 <歴史教科書をめぐる政治的言説とその特徴> 中村政則 外, 《歴史と眞實》(筑摩書
房, 東京)
林博史, 2007 <沖繩戦 集團決定への教科書検定> 《歴史學研究》 831
中村政則, 2001 <日本の歴史教科書(扶桑社刊)にみる歴史敘述と歴史觀> 《韓國獨立運動史研究》 16
俵義文, 1997·2001 《教科書攻撃の深層》(學習の友社, 東京)
_____, 2001 《徹底檢證 あぶない教科書》(學習の友社, 東京)

〈첨부자료 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출판사	1980년 김정	1992년 김정
中敎出版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조선에서의 약 70만명 외에 중국에서도 약 4만명이 강제로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을 뿐아니라, 군을 수행해야만 했던 여성도 있었다.(258쪽)
學校圖書		광산·토목 등의 중노동에는 조선이나 중국사람까지도 강제로 끌고와서 일을 시켰다. 또한 군대에서도 인원이 부족하자 대학생과 조선·대만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냈다.(243쪽)
東京書籍		전황이 악화되자 조선·대만의 식민지 사람들도 군대에 소집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까지도 일본으로 끌고 와서 악조건 하에서 공장이나 관산등의 중노동에 종사하게 했다. 1945년에는 제일조선인 수는 그때까지 이주해온 사람을 합하여 조선 총인구의 1할에 해당하는 2백수십만명에 달했다.(281쪽)
大阪書籍		조선에서는 약 70만명을 강제로 일본내지로 연행하여 노동시켰으며, <i>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서 강제동원했습니다.</i> 게다가 대만·조선에도 징병령이 내렸습니다.(262쪽)
敎育出版		강제로 일본에 끌려온 약 70만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에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게다가 징병제 아래에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 <i>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i> (273쪽)
日本書籍		
清水書院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 중국인은 5만명에 달했다고 한다.(263쪽)	전시하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1941년경부터 약 8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에 연행하여 탄광·광산 등에서 일하게 하였다. 또한 중국인도 4만명 가까이 강제연행했다. 조선인과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 일본의 병력이 부족해지자 조선과 대만인들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싸움터로 동원했다.(245쪽)
帝國書院	일본은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70만명 이상의 조선사람들과 약 4만명의 중국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와서 탄광 등에서 심한 노동에 종사시켰습니다.(291쪽)	70만명 이상의 조선 사람들과 약 4만명의 중국사람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서 탄광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286쪽).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 와서 일본 각지의 공장이나 탄광에서 노동했습니다. (292쪽)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3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한국 관련내용 변화분석>에서 발췌

출판사	1996년 검정	2001년 검정	2005년 검정
東京書籍	또 국내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 및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되어,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되었다. <i>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지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i> (263쪽)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전장에서 죽기도 하고, 노동에 끌려 나오기도 하여,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희생자가 생기었습니다. (175쪽)	일본에 연행되어 의사에 반하여 일하게 된 조선인, 중국인 등도 있었고, 그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낮아 지극히 힘든 생활을 강요 당했다.(193쪽)
大阪書籍	더욱이 조선에서는 약 70만 명, 중국에서도 약 4만 명을 연행하여 광산 등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i>위안부로서 전장으로 연행하고 있습니다.</i> 더욱이 대만·조선에도 징병령을 내렸습니다.(260~ 261쪽)	또한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령이 실시되었습니다. ... 그리고, 조선에서는 약 70만 명, 중국에서도 약 4만 명을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171쪽)	조선과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본의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 ... 조선이나 중국의 점령지로부터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광산과 방공호 제작 등의 일을 시켰다.(200쪽)
教育出版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 명의 조선인과 약 4만 명의 중국인은 탄광 중노동에 종사하였다. 더욱이 징병제라는 것으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다. 또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i>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i> (261쪽)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 명의 조선인과 약 4만 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의 엄한 노동현장에서 일하였다. 또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대만과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다. 더욱이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공장 등으로 보내졌다. (204쪽)	식민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와서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엄격한 노동조건 하에서 괴로운 생활을 강요당했다 ... 조선과 대만에서는 전쟁말기에 지원병제도가 개정되어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고 많은 조선인 여성들도 공장에 보내졌다.(173쪽)
日本書籍 新社	<i>또한 여성을 위안부로 종군시키고 가혹한 취급을 하였다.</i> (264쪽)	<i>또한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 병사의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졌습니다.</i> (180쪽)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개인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까지 각국 정부가 빼앗은 것이 불가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에 입각하여 강제	조선이나 중국의 점령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내지로 강제적으로 데려왔다.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수는 약 70만명, 중국인의 수는 4만명에 달했다.(202쪽) 1943년 조선에서, 1944년 대만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었다.(205쪽) 이 전쟁으로 일본인 사망자는 군인, 민간인을 합하여 310만명 (조선인, 대만인 5만명 포함),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망자는 중국만 해

		<p>연행 당한 사람들, 구 위안부 여성이나 남경사건의 희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잇달아 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205쪽)</p> <p><사진> 김학순 씨의 고소</p> <p>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한 김학순씨(205쪽)</p>	<p>도 2,180만명에 달한다(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발표). (207쪽)</p> <p>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 병사들의 위해 조선 등 아시아의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모집되어 전장으로 보내졌다.(202쪽)</p> <p>강제연행된 사람들이나 남경사건의 희생자들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제기하고 있다.(231쪽)</p> <p><사진>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보도한 신문(朝日新聞.1991.12.6)</p>
<p>日本文教出版</p>	<p>식민지인 대만이나 조선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위안부로서 전장의 군에 수행하도록 강요당한 여성도 있었다.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약 70만 명, 중국에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252쪽)</p> <p><사진> 조선인의 강제연행 토목공사 및 광산 등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252쪽)</p>	<p>... 그러나 식민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을 노동자로 징발하였다. 국내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에서 약 70만, 중국에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되어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당하였다.(209쪽)</p>	<p>식민지 대만이나 조선에서는 병사의 모집이 시작되고 ... (181쪽). 조선으로부터 약 70만, 중국으로부터 약 4만 of 사람들을 ... 일본에 데려왔고, 그들은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당했다.(187쪽)</p>
<p>清水書院</p>	<p>조선인, 중국인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 또한 조선, 타이완 등의 여성 중에는 전지의 위안시설에서 종사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259쪽)</p>	<p>또한 전지의 비인도적인 위안시설에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도 있었다.(189쪽)</p>	<p>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제를 강제해서 일본병력으로서 전쟁에 동원했다 ...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해서 석탄갱도나 광산 등에서 일하게 했다. (203쪽) 조선이나 대만에는 징병제가 강제되어 각각 20만명, 2만명이 태평양전쟁에 동원되었다. 또한 일본 본국이나 사할린 등으로 노동력으로 강제적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약 72만명(1939~1945), 점령하에 있던 중국에서는 약 4만명(1943~1945)에 이른다고 이야기되고 있다.(204쪽)</p>
<p>帝國書院</p>	<p>전쟁에서 남성은 병사로, 여성은 위안부 등으로 징집하여 건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257</p>	<p>전시기간 중 위안시설로 보내진 사람들과 구일본 군으로서 징병된 한국</p>	<p>... 기업 등에서 반강제로 할당을 결정하여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서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p>

<p>쪽 칼럼) ... 게다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일본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조선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연행하였습니다.</p> <p>이 사람들은 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설업 등에서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종사 당하였습니다. 이들 지역 출신자 중에는 위안부였던 사람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했던 사람들, 전전 일본령이었던 지역에 종전으로 잔류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271쪽)</p>	<p>대만 사람의 남성 등의 보상문제가 재판장에서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221쪽)</p>	<p>등으로 데려가 낮은 임금으로 심한 노동을 시켰다(209쪽). 대만과 조선에서도 징병이 실시되었다. (210쪽)</p> <p>(각주1): 전시 중 위안시설로 보내진 여성과 일본군으로 징병된 한국, 대만 남성 등의 보상문제가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231쪽)</p>
---	--	---

자료: 1996년·2001년: 국사편찬위원회, 200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검정본) 한국관련내용 시대별·주제별 분석 보고서》 231~233

2005년: 신주백, 2008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근대사Ⅱ - 현대사》 (선인) 243~244, 248~250

〈첨부자료 2〉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일본군위안부’ 서술

《일본사 A》

번호	출판사	서명 (2003)	2003년	2007년
1	第一	高等學校 日本史A 人・くらし・ 未來	또한 조선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종 구실을 붙여서 권유하거나, 강제연행하거나 해서 중군위안부로 삼았다.	또한, 조선인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111쪽) 강제연행과 ‘중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도 남아있다.(170쪽)
2	三省堂	日本史A	여성도 정신대로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되었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117쪽)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을 만들어 지원했고(127쪽)	여성도 정신대로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되었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117쪽)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간에서 민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만들게 하여 지원했고(127쪽) 점령지에서는 일본은 군정을 실시하여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노동자와 중군위안부 등으로 동원했다.(126쪽)
3	山川	日本史A	또한 위안부로서 각지의 軍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200쪽)	또한 위안부로서 각지의 軍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200쪽)
4	東書	日本史A 現代から の歴史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중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부터 일본의 오키나와제도, 홋카이도, 사할린 등에게까지 이르렀다.(147쪽)	그 동안 모금을 모아서 ‘중군위안부’였던 사람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1995)하고 (중략)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적인 인권인식의 고조를 반영한 것이다.(28쪽) 아시아 여성기금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에 있어서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금전문제화 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국내

			<p>외에서 제기되었다.</p> <p>이 기금과 관련,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역대 총리가 보낸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총리의 사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 번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중압으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쳐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러한 사실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부당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28쪽).</p> <p>일본에서도 예컨대 중군위안부나 남경대학살 등 자국에 불리한 사실은 교과서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31쪽).</p> <p>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네덜란드인 등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위안소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 동인도 등에서부터 일본의 오키나와제도, 홋카이도, 사할린 등에게까지 이르렀다.(148~149쪽)</p> <p>“중군위안부”로 되어졌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현재의 여성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국민모금을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178)</p>
--	--	--	---

《일본사 B》

번호	출판사	서명(2003)	2003년	2007년
1	實教	高校 日本史B	그리고 군도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는 일본군의 監理하에 병사의 性 상대로서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 등의 많은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는 일본군의 監理하에 병사의 性 상대로서 조선 을 중심으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네덜란드 등의 많은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

			<p>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했다.(209쪽)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했다. 그 가운데 원‘위안부’, 구 일본군 군인군속 등이 1991년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했다.(242쪽)</p> <p>1993년에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고노관방장관 담화를 발표, 군의 관여하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인정, ‘위안부’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였다. 1994년에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p> <p>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중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구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의 보고를 받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동 보고에 留意한다고 표명했다. 동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항목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243쪽)</p>	<p>했다.(203쪽)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수상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지배에의 반성을 표명했으나 전후보상 문제의 해결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235)</p> <p>중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사실을 기술해 온 교과서를 “자학적”이라고 비난하는 움직임이 생겨나, 이런 주장에 근거한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가 나타났다.(239쪽)</p> <p>1993년에는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고노관방장관 담화를 발표, 군의 관여하에 위안소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안부’로 되었던 사람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1994년 ‘위안부’였던 사람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243쪽)</p> <p>1996년 국제인권위원회는 ‘중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구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의 보고를 받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동 보고서에 유의할 것을 표명했다. 동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에 걸친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243쪽)</p> <p>설명(1)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에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에 의한 재판형태를 띤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도쿄에서 개최했다.(243쪽)</p>
2	實教	日本史B	주제학습 또한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주제학습 또한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性的

7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性的 상대로서 ‘중군위안부’로 되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前線과 오키나와 등으로 연행되었다.(377)	상대로서 ‘중군위안부’로 되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前線과 오키나와 등으로 연행되었다.(355)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기’(일본국헌법)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중군위안부와 강제노동의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373쪽)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 있는 지위’(일본국헌법)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중군위안부나 강제노동 보상 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함과 동시에(391쪽)
3	三省堂	日本史B	여성도 정신대에 조직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330쪽)	여성도 정신대에 조직되어 군사공장 등 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일본군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서 필리핀 등의 젊은 여성과 함께 戰地에 보내졌다.(330쪽)
4	清水	高等學校 日本史B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선인이 많았다.(221쪽)	또한 전지에는 위안부도 보내졌는데, 조선인이 많았다.(219쪽)
5	山川	新日本史	나아가 조선인 여성 중에는 중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사람도 있었다.(356쪽)	나아가 조선인 여성 중에는 중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356쪽)
6	山川	高教 日本史	기술 없음	기술 없음

《세계사 A》

번호	출판사	서명	2003년도	2007년도
1	東書	世界史A	중군위안부로서 전선에 보내진 많은 여성도 있었다.(172쪽)	나아가 위안부로서도 전선으로 보내진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세계사 A18~86)
2	實教			중군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어진 여성도 적지 않았다.(147쪽)

《세계사 B》

번호	출판사	서명	2003년도	2007년도
1	山川	新世界史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2	清水	高等學校 世界史B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3	帝國	新編高等 世界史B 新訂版	기술없음(공습, 원폭피해는 기술)	기술없음

《윤리》

번호	출판사	서명	2007년도
1	實教		전후 보상: 과거에 일본이 행한 남경대학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개인보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민간모금)을 발족시켰다. (2007년 해산).

《정치·경제》

번호	출판사	서명	2007년도
1	東京		정부는 이 전후보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구 연합국 포로와 종군위안부 등 전시 중 일본에 의해 비인도적 취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도상의 문제로서 성의 있는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95쪽)
2	清水		일본군에 의해 징용되어 전범이 된 사람들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으로 일본에와 피해를 입은 피폭자 등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공식사죄와 보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의식이 고양된 점이 있다. 일본정부는 전쟁과 국가간의 문제로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89쪽)
3	實教		1990년대가 되면 元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가 주목을 끌어, 새로이 전쟁책임·전후책임이 요구됐다.(93~94쪽)
4	第一		일본과 근린제국과의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일으킨 종군위안부 문제(주1)와 강제연행 문제 등의 전후 보상 문제가 있다. 근린제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주1) 전시중, 중국·조선·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다수의 여성이 연행되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보상은 해결되었다고 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1993년 공식으로 사죄하고,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했다(2007년 종료 예정).(54쪽)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07년도 검정본 일본역사교과서 분석집> 279~284

〈첨부자료 3〉 한국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

출판사	내용	비고
금성출판사	<p><5. 전쟁 동원과 군 위안부 징용> 중 <군 위안부, 여성까지 전쟁 수단으로></p> <p>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임의로 조선여성들을 동원하던 일제는 전쟁막바지에 이르러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였다(1944).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과 조선의 군수 공장에 보내져 강제노역을 당하였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군위부로 이용되었다. 일제는 이미 1930년대 초 대륙 침략과 함께 군 위안소를 시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전쟁 말기에는 이를 더욱 조직화하여 조선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징발하였던 것이다.</p> <p>일제 말기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조선여성들의 수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 중에 군 위안부로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도 있다.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163쪽)</p> <p><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끓는 절규가 터진다> “일본 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p> <p>한 손으론 플래카드를 들고 다른 손으로 힘겹게 구호를 외치는 위안부 할머니들, 고목꺾길 같은 그 손은 팡팡 얼어붙어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1992년 1월 8일에 처음 수요집회를 연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져왔다. 위안부 할머니 여섯 분과 경실련, 수녀회, 학생, 시민들 50여명이 외치는 함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도쿄대학 법대생들이 찾아와서 함께 묵념하며 자국의 범죄 사실을 반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위안부 할머니들은 “수고했다”며 학생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오늘의 한국, 2000년 4월](163쪽)</p>	<p>비고</p> <p><사진 삽입> - 2000년 국제법 정에서 증언하는 생존자 - 수요시위하는 생존자</p> <p><사이트 기재> - 정대협 사이트</p>
두산	<p><4. 경제수탈의 심화> 중 <대륙침략과 병참 기지화 정책></p> <p>더욱이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위안부로 희생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153쪽)</p> <p><군위안부>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군위안부로 동원하였다. 1942년에 일제 의해 캄보디아에 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생존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훈 할머니[한국명 李南伊]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군 위안부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훈 할머니는 1998년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방문한</p>	<p><증언 자료 삽입> - ‘위안부’ 생존자 김복동의 수기를 요약, 기술.</p> <p><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p>

	<p>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은 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수기를 요약할 글이다(이하 생략).(155쪽)</p>	
<p>대한고 과서</p>	<p><5. 아직도 진행 중인 군대 위안부 논쟁></p> <p>자료1- <자료읽기>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생략)</p> <p>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일제는 우리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 행위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반 세기나 지난 뒤였다. 수많은 여성이 희생되었던 이 엄청난 사건의 진상이 왜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을까?</p> <p>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독일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동원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도 부인하였다. 또 요즈음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성의 정조에 대해서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회피하였다.</p> <p>그러나 1990년에 여성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만들면서 오랜 침묵이 깨어지게 되었다.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잇따라 증언을 하였고 자료2와 같이 군대위안부 동원에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에는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간 법정인 여성국제 전범법정이 열려 일본국왕과 일본군 간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152~153쪽)</p> <p>자료2- 일본군 병참부가 관장하던 현지 위안소의 규칙: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일본 정부는, 한 일본인 역사학자에 의해 육군성 병무과에서 작성한 군대 위안부 모집에 관한 서류가 발견되자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153쪽)</p> <p>자료3- <자료읽기> 당시 일왕은 군대 위안부 동원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유죄이다.</p> <p>군대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전쟁 중의 반인권 범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에게 최종 책임자로서 유죄를 선고한다.</p> <p>- 2000 일본군 성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판결문, 2000년 12월 12일 -(153쪽)</p>	<p><증언 자료 삽입></p> <p>- 정대협 자료 중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사례 4가지.</p> <p><역사자료 삽입></p> <p>-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일본군 문서</p> <p><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자료 삽입></p> <p>- 2000년 여성국제법정 판결문</p> <p><문제제기></p> <p>- 열린 과제를 제시하여 토론 유도</p> <p><사이트 삽입></p> <p>- 한국정신대연구소 사이트 소개</p>

	<p>열린과제- 1. 국제 민간 법정에서 자료3과 같은 결론을 내린 까닭을 자료 1-2를 참고하여 설명해보자.</p> <p>2. 군대 위안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지어 토론해 보자.</p> <p>3. 한국 정신대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자.</p> <p>현재 일본정부는 사과하는 하면서도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에서 모든 대일 청구권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피해 배상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확보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즉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전 세계 여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53쪽)</p>	
<p>천재 교육</p>	<p><4. 경제 수탈의 심화> 중 <침략 전쟁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p> <p>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의 상당수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각 지역의 전쟁터로 보내져 군인들을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즉, 일본군은 점령 지역과 식민지 곳곳에 군 위안소를 설치,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게 조직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169쪽)</p>	<p><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p>
<p>중앙교육진흥연구소</p>	<p><4. 경제 수탈의 심화> 중 <일제 말기 전시 수탈의 심화></p> <p>군위안부의 동원은 1937년에 일제의 난징대학살 이후 본격화되었다. 난징 점령 당시 일제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유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에 일제는 군인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릇된 방편으로 군 위안소를 마련하고 한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였다.</p> <p>일제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이나 강제 납치 등의 수법으로 한국인 여성들을 끌고 갔다. 한국 여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다. 이렇게 끌려간 위안부의 숫자는 무려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p> <p>전쟁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인들은 위안부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하거나 심지어 위안부 여성들을 동굴에 가두고 폭탄을 던져 몰살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랑스러운 일왕의 군대라고 떠들었던 자신들의 식민지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면서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려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p> <p>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위안부 여성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험난함을 이겨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하였다.(175쪽)</p> <p>과제- 광복 이후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도는 보상, 일본의 사죄 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조사해 보자. (175쪽)</p>	<p><사진 삽입> -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p> <p><과제 제시> - 과제를 제시하여 후속 학습 유도</p>

<p>법문사</p>	<p><4. 경제수탈의 심화> 중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경제 침탈></p> <p>잊을 수 없는 역사: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p> <p>자료2-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할머니들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반장 부인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집에서 적어도 딸 한 명씩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식모로 있던 집의 딸을 대신해서 어떤 일본인을 따라 나섰다.”,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며 여자를 모집한다기에 나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이 모집에 응하였다”,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순경에 붙들려 그 길로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갔다”, “학교 담임 선생이 정신대에 나가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일본 도오야마 현에 있는 공장으로 갔다. 그러나 공장 견학만 시킨 뒤 곧바로 남양 군도의 위안소로 끌려갔다.”</p> <p>당시에는 여성들의 동원뿐만 아니라 징용과 징병을 위해서 10가구 단위의 애국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필요한 인원을 잡아갔다. 이렇게 강제로 잡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을 내세워 “나라(일본)를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우리의 딸을 바치자”라고 선동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위안부로 끌려온 여성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쟁터에 남겨두고 자신들만 도주하였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패전으로 자포자기한 군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위안부들에게도 자살을 강요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굴이나 잠수함에 여성들을 집어넣고 몰살시켰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관계 자료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민간 업자들이 여성들을 사 온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여성들을 동원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여성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항에 관한 수정안-(158쪽)</p>	<p><사진 삽입></p> <p>- 전시기 ‘위안부’ 자료 사진</p>
------------	--	---

* 고등 근현대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개정고시)부터 선택과목으로 편입
출처: 서민아, 2007,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일제 강제연행’ 서술의 현황과 내용분석>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71~84의 각각의 표에서 재인용

[비평문]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

본 논문을 읽고 우선 통감한 것은 여성학 내지 젠더학과 실증사학의 대화라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역사학의 하나의 산물인 역사 교과서의 기술 양식에 대해 과연 양쪽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평자는 이에 관해 지금 극히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본 논문은 일본의 교과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교과서의, 필자가 말하는 바 ‘젠더 편향성’이라는 것을 그 나름으로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선 논술의 스타일로서는 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이른바 ‘중군위안부’의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시 동원의 요원으로서의 ‘(여자)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다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 그대로의 입론이다. 이에겐 전혀 수긍할 수 없다. 확실히 필자는 근년에 그의 저서 [2004 《일본군 성노예제》(서울대학교출판부); 일본어 판 2008 《日本軍の性奴隷制》(論創社)]에서 ‘정신대’라는 것을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 성의 착취’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이들 용어가 세상에 드러난 시기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명백히 史實에 반하는 것이다. ‘여자정신대’는 1944년 8월에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군수공장 등에서의 ‘근로동원’에 한정된 용어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 측의 학계와 운동체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위안부’에 관한 학술 연구의 도달점을 알기 위해서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씨의 《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社, 1999)는 한일의 연구자가 필독하여야 할 책이다.

점령지에서 舊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직영의 문제와 이른바 위안부 ‘강제연행’의 문제를 진실로 추구하려면,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는 치명적이다. 적어도 지금 일본 측의 실증 연구의 장에서는 예전과 같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것은, 의거하고 있는 정치적 신조와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이미 그 모습을 감춘 지 오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도서에서 그 기술이 사라진 것은 결코 여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며 실증 연구의 진전에 따른 부정확한 기술의 ‘도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평자는 생각하고 있다.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 ‘전장과 성’이라는 난제를 과연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 현장의 진지한 망설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측만의 의심이 아니며 한국 내에서도 주로 근대 경제사의 연구 그룹에서 그 ‘혼동’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기과량); 일본어 관 2009 《大韓民國の物語》(文藝春秋)]. 따라서 ‘중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줄어든 것을 일본 국내의 ‘우경화’와 그에 따른 ‘젠더 경시’만으로 설명하는 입론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가령 이러한 논리를 원용한다면 한국측의 교과서에 여성에 관한 기술이 증가한 것도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양값음 식의 비판에 연결될 지도 모른다. 평자도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의 그러한 ‘공기’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술 토론·공동 연구의 장에서 연구자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과 주장에 어디까지나 금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어 평자는 필자의 일본 사회 이해, 특히 ‘가족 제도’에 관한 이미지에 중대한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의 골자는, 이른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내지는 그가 말하는 ‘脫構築’에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성학·젠더론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전근대에서 한일 양 사회의 ‘가부장’이라는 것은 초극하여야 할 공통의 목표라고는 해도, 그 역사적 배경과 법적 상태는 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호적제도의 이식’에 관한 필자의 사실 파악에 그 단적인 예가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에 ‘조선호적령’의 시행에 따라 일본 국내의 舊 민법에 규정된 ‘호주’ 내지는 ‘호적’이 완전히 이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 통치 하의 한반도에는 ‘대일본제국헌법’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적법 등을 제외하고 어디까지나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 등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법체제로 운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애당초 舊 민법의 적용 범위에서 ‘外地’는 배제되어 있었으며 한반도에 ‘호주’와 ‘호적’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였지만 일본 ‘內地’의 그것과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물론 舊 민법 하에서 여성의 권리가 제한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틀릴 것도 없는 사실이며 또 한반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어떤 일정 범위에서 권력 기구가 개입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제사의 계승’이라는 一家의 존속에 관한 중대사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그 행위 주체는 각각의 가족과 一族이며, 특히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한반도 조선 사회의 ‘남계 상속’의 改變에는 손을 대지 않았

다. 이를 ‘舊慣의 존중’으로 볼 것인지, ‘차별의 온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갈려 있지만, 하여간 舊 민법 하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여성 호주도 존재하고 남계 여자의 상속도 가능하였던 일본 사회에 비해 한국·조선 사회에서는 1939년 조선민사령의 개정, 이른바 ‘창씨개명’의 실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남계 남자로 제한된 상속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더구나 ‘창씨’와 ‘개명’은 각각 서로 다른 법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氏名の 개변 부분만 클로즈업되기 쉬운 ‘창씨’와 ‘개명’에서, 개명 여부는 어떻든 간에 ‘창씨’는 확실히 ‘일본식 이에(家)’를,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게 되는 법률 개정으로 ‘설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이에’야말로 ‘戶’이며 그리고 각각의 호의 명칭이야말로 ‘氏’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징병제의 시행과 전시기의 ‘근로동원’·‘징용’을 염두에 두면서 순차적으로 완전한 ‘내지화’가 도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일본 통치기의 한반도에는 순 일본식의 ‘호주’, ‘호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나아가서는 본론의 전제 그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명조로 부언하자면, 평자는 교과서의 기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젠더 밸런스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그 ‘불균형’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극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史實의 검증과 관계 법령의 내용 확인, 혹은 그 효력 범위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적당히 하여둔 채로는 조만간 잘 나아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한일 여성학·젠더론 연구자의 분기를 기대한다.

[집필자 답변]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 교과서의 젠더 편향에 관한 논문의 중심 요지에 대해서보다는 논평자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입장과 창씨개명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다소 핵심에서 벗어난 논평이라고 생각된다.

1. ‘젠더학과 실증사학의 대화 곤란하다’고 한 논평자의 첫 문장은 논평 전체의 매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역사학에서 여성의 발견은 매우 실증적인 연구방법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젠더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역사연구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2. ‘중군위안부’에 대해서 논평자는 여러 가지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필자의 논문은 우선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정신대’의 개념을 지적하였다. “또 많은 조선인 등 여성도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싸움터로 보내졌다.”(教育出版, 1992년 검정, 273쪽)는 기술에서 싸움터로 보내진 조선인 여성 “정신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大阪書籍의 “나이 어린 여성도 정신대로 강제동원했습니다”(262쪽)는 기술도 명확히 근로정신대를 지칭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여자정신대는 1944년 8월에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군수공장 등에서의 ‘근로동원’에 한정된 용어이다”라고 한 논평자의 기술은 틀린 것이다. 1939년 함흥에서 농촌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각 군에서 60~100명씩 뽑아 국책공사에 동원한 이래(《매일신보》 1940년 11월 13일) 내선일체정신대, 증산운동정신대, 부인농업정신대, 의용봉공정신대, 근로보국정신대, 학도정신대, 보국정신대, 국어보급정신대, 보도정신대, 인술정신대 등등 여러 종류의 정신대가 실제로 만들어져 조선의 남녀를 동원했다. 천황칙령으로 1944년에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근로동원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에서 뿐이다. 여러 문서에서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관알선에 의해 정신대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일본 측의 실증연구의 장에서는...감춘지 오래이다”라고 논평자는 말했는데, 일본측의 실증연구자들은 앞에 지적한 教育出版의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대’ 동원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와 그 사회사적 규명은 이루어졌는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령의 실제적 시행에 있어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있는지. 필자는 아직 그러한 연구를 본 적이 없다. 일본 연구자들이 “중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어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용하는지. 필자는 아직 그런 문서자료를 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중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여, “중군위안부”라는 용어사용을 중단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넷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책을 위안부 연구의 도달점이라고 말한데 대해서, 그 자의적 기술에 관한 《계간 전쟁책임연구》에서의 비판이나 난징대학살을 쓴 아이리스 장(Iris Chang)의 하타씨에 대한 평가, 우과 잡지에 실은 하타씨의 수많은 글들(예: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전직 병사를 ‘일부의 극악인’이라고 말하는 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 연구자가 아니다. 위안부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섯째, 일본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줄어든 것은 명백히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분위기, 그에 따른 자기 검열에 따른 것이고, 교과서 기술에서 젠더경시, 시민사회 경시, 자국중심서술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우경화의 반대가 곧 좌경화라는 논평자의 이해는 학술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기술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에 의한 것이다.

3. 호적제도의 이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논평자의 논지는 명확치 않다. 예컨대, 식민지 조선에 순 일본식 호주, 호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던가, 행위주체는 각 가족과 일족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호적령을 일본호적제도의 틀에 따라 만들었으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그 내용이 똑 같을 수는 없으며, 행위주체 개인이 국가의 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본의 호적제도 이식으로 모든 조선인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법적 관리시스템, 즉 행정 및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되었으며, 호주상속이라는 단선적 구조를 통하여 호주 간에는 평등, 가족 내에서는 남녀불평등이라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한반도가 무사문화 하의 일본보다 여성권리가 더 심각했다고 기술하는 것은 학술적 언술이 아니다. 또한 논평자가 말하는 조선 가족제도는 결국 소수의 양반 가족제도에 국한되며, 양민의 가족에 여성호주가 존재했다는 연구가 한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언한다.